DJ재임 경상흑자 906억달러↑

역대 정권 중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가 파탄 난 외환위기 직후 취임했지만,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외환보유액 확충과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선전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과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기조 탈피 등 미완의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재앙인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만으로도 김대중 정권이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정권 중 연평균 증가액 가장 많아
외환위기 조기 졸업… 경제 성적 최우수

◇경상흑자 906억弗 물가도 안정=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고 김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98~2002년 경상수지 흑자는 906억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181억1천4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노무현 정부가 연평균 132억7천300만달러로 뒤를 이었고 노태우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각각 10억6천500만달러와 5억7천100만달러였다. 김영삼 정부는 5년간 432억7천600만달러 줄어들면서 연평균 감소액이 86억5천500만달러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경상흑자에 따른 외화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도 많이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말 204억600만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말에는 1천214억1천300만달러로 늘어나면서 5년간 1천10억700만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은 202억100만달러로 노무현 정부의 281억6천2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대중 정부 때는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5%로 노무현 정부 때의 3.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물가 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때 7.4%로 가장 높았고 전두환 정부 6.1%, 김영삼 정부 5.0% 등이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부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이전 정권들보다 크게 낮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4.5%로 노무현 정부의 4.3%보다 높았지만, 전두환 정부(8.7%), 노태우 정부(8.4%), 김영삼 정부(7.1%) 등에 비해서는 낮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1998년 이후 성장률은 1999년 9.5%, 2000년 8.5%, 2001년 4.0%, 2002년 7.2% 등으로 4년 평균 7.3%였다.

◇'국가부도'에서 'IMF 모범생'으로=김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꼽으라면 단연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했다는 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며 "외신들이 한국을 'IMF 모범생'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DJ 기념품 인기 속속 판매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서적과 기념품 등이 온라인몰에서 속속 상품으로 올라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옥션(www.auction.co.kr)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 관련 상품의 등록건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 15%가량 증가했다.

이 중 80% 이상이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집필한 서적이거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서적이다.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대중신드롬' 등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정치사에 남긴 의미와 햇볕정책 등 주요 업적에 대해 분석하는 서적들은 서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반나절 만에 평소보다 2배 이상 판매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도 중고 매물이 대거 올라왔으나 품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기념우표를 비롯해 취임기념우표 등 기념우표도 대거 올라와 있다. 서거 소식 이후 개인 우표 소장품도 매물로 쏟아져 평소 매물의 2배 이상인 20여 건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옥션에 올라온 매물 중에는 개인 소장 수집품이 절반에 가까운 4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사인이 전사된 원목 탁상시계도 경매로 올라와 있다. 이 시계에는 '중추가절 민주당 김대중'이라고 한문으로 김 전 대통령 자필이 전사돼 있다.

이밖에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사인이 전사된 시계, 91년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등장한 보도사진 등이 경매로 올라왔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된 우표와 기념품, 서적 등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명동 한 우표·화폐전문점에서 직원이 김 전 대통령의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과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우표 등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소형주택 월세도 소득공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친서민 세제지원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업회사법인과 자경농지의 양도세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집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간 120만원 한도 이내라면 불입액의 40%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다면 이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세금납세 의무의 소멸)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에 어업회사법인을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 대상 법인에 추가해 2012년까지 적용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세 규정을 2012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요건도 완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